

“北 서해발사장서 액체연료 엔진시험 준비 정황”

개폐식 대피소 옮겨져...기존 없던 차량 4~5대도 포착 발사 언제?...기상상황·기술적 문제 등 발사 신중 요인



플래닛랩스 FBC가 촬영한 위성사진에 30일 북한 동창리 인근 서해위성 발사장의 새로 건설된 발사대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북한이 예고한 위성발사 기한이 지난 11일 0시부로 끝난 가운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며 2차 발사와의 연관성이 주목된다.

다만 날씨 등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2차 발사가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의 상업용 위성사진은 수직엔진 시험대(VETS)의 새로운 활동을 보여준다”며 “이는 새로운 액체연료 엔진 시험 준비를 시사할 수 있다”고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한 이달 5일부터 개폐식 대피소가 시험대와 계류장을 연결하는 경사로로 옮겨졌으며 기존에 없던 차량 4~5대가 계류장에 도착했다고도 덧붙였다.

개폐식 대피소는 북한이 액체연료 엔진 등을 시험할 때 장비와 인력을 보호하고 위성사진 촬영을 막는 이중용도 시설을 뜻한다.

38노스는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개폐식 대피소는 일반적으로 시험대 옆으로 옮겨진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을 발사했으나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 해당 우주발사체에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실려있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이날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은 정상비행하던 중 1계단(단계) 분리 후 2계단 발동기(로켓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며 이례적으로 발사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이어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발사에서 나타난 엄중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해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며 여러 가지 부분시험들을 거쳐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와 일본에 통보한 발사 예고 기간은 6월 11일 0시까지다. 발사 시점이 지났음에도 아직 2차 발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차 발사가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날씨와 기술적 문제, 2차 발사 실패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빠른 추진을”...하세일 지적

광주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사업이 사업비 증가라는 압축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3)은 9일 광주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사업이 하세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부권 노인복합시설은 권역별 노인복합시설 확충을 목표로 추진된 치매예방·관리 위한 특화형 노인복지시설로, 올해 착공해 2024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이외에도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등 3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토지보상가가 당초 예상보다 2배가량 증가하고, 건축비 증가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사업비도 크게 늘면서 불가피하게 추진이 중단됐다. 광주시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6월부터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추경예산과 내년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을 시의원 “광주시 국내 출장비 잔액 과다”

광주시 직원 출장비가 체계적으로 편성 집행되지 않아 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희을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3)은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출장비(국내 여비) 집행잔액 과다 문제를 지적했다.

출장비는 부서별 단위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부서 기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서 인원수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행정운영경비비로 나뉜다.

전체 실·국 일반운영비 545개 사업 예산 199억9038만원 중 집행잔액 7억6466만원(38.4%), 행정운영경비 예산 9억1501만원 중 집행잔액 2억8417만원(31.1%) 등 모두 29억540만원 가운데 10억4883만원, 비율로는 36.1%가 불용처리됐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52개 사업 7444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5개 부서 4113만원 등 합쳐서 1억1558만원이 집행도 하지 못한 채 잔액 불용처리됐다. 박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서 국내 여비가 집행되지 못할 것을 앞둔다면 연발 정리추경에 반영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생긴 건 소극행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6·10만세의 노래 제창하는 학생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97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에서 학생들이 6·10만세의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6·10 민주항쟁” 36주년...전남 더 나은 민주주의 다짐

순천시 ‘민주로, 함께 걸은 길, 다시 가야 할 길’ 주제 기념식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역사인 6·10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36주년 6·10민주항쟁 광주·전남 기념식이 10일 순천부습성 남문터 광장에서 열렸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기념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은 ‘민주로(路), 함께 걸은 길, 다시 가야 할 길’을 주제로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이 주관했다.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표결...가결에 무계

오늘 본회의에서 윤·이 체포동의안 처리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통과)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돈 봉투 사건과 더불어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까지 터진 상황에서, 이번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반대)되면 당이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앞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재명 대표에게만 불체포특권을 적용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그간 민주당이 부결 필요성을 주장해 왔던 ‘검찰의 기획 수사’ 논리도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온 길을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다는 다짐했다.

문금주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피운 민주열사·애국시민들을 기억하고 6월 항쟁의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당연한 책무”라며 “전남도는 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알리는데 더욱 힘쓰고 도민 모두 행복할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36년 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열사의 삶을 되새기고, 현 시대와 호흡하며 민주로(路) 걸어

온 길을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다는 다짐했다.

문금주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피운 민주열사·애국시민들을 기억하고 6월 항쟁의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당연한 책무”라며 “전남도는 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알리는데 더욱 힘쓰고 도민 모두 행복할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연 기자

민주당 호남권 청년위원회 정책추진 ‘맞손’

긴밀한 네트워킹·청년정책 발굴 위한 공동정책추진 협약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청년위원회가 정책추진과 문화교류에 맞손을 잡았다.

지난 9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주시당, 전남도당, 전북도당 등 호남권 3개 시·도당 청년위원회는 이날 시당 대회의실에서 긴밀한 네트워킹과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공동정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호남권 시·도당 청년위원장(광주 이정환, 전남 이현백, 전북 이성국) 인사말, 공동추진 정책협약, 청년당원의 날 개최 준비상황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접 네트워킹을 형성해 ▲청년정책 발굴 ▲청년정치 참여 확대 ▲청년당원 자긍심 고취 ▲정치 효능감 높이기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시·도당 간의 정책과 문화교류를 통해 청년정책 전문가를 발굴하고, 청년의 삶과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에 일조할 예정이다.

이정환 광주시당 청년위원장은 “청년들이 겪는 고통은 세대가 아니라 시대적 문제로, 청년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청년의 꿈과 미래를 위해 호남권 청년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지희 기자

“도쿄전력, 오염수 방류 시운전...尹 정부 뭐하나”

“尹 정부, 오염수 방류 찬성·반대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도와 관련해 “보류 되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준비가 무엇이고 방류만 남는데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대체 무엇이나”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도쿄전력이 내일부터 2주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실시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안전성을 검증한다며 보냈던 시찰단은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며

“IAEA 평가 결과만 기다릴 것이면 시찰단은 왜 보냈나. 우리 자체적인 검증과 결론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었다.

그는 “정부는 애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에 이의를 제기할 뜻이 없다.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라며 “여당이 앞장서서 국민 불안을 ‘괴담’으로 낙인찍으며 오염수의 안전성을 맹무세처럼 반복하는 것도 파렴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밝혀라”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이나, 반대나”고 전했다.

김기현 “아들 코인업체 회사원”...野 “동문서답”

“누가 회사원 아니라고 했나...코인 보유·거래내역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의 아들이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다니는 의혹에 ‘회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을 받고 일하는 회사원’이라고 해명하자 “곽상도 전 의원은 50억 퇴직금을 받은 아들을 화천대유 회원일뿐이라고 주장했는데 김 대표도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걸로 코치 받았나”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가 야당에 대해 ‘코치를 받아 코인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김 대표 자신이야말로 가상자산 회사 임원인 아들의 코치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기했던 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때 보유 현황과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했던 김 대표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이 있으니 밝혀야 하는 주장이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나”며 “있는 사실대로 밝혀면 될 일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김 대표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일하는 아들에 대해 중소기업에서 봉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서 황변했다”며 “누가 언제 회사원이 아니라고 했나. 이게 무슨 자다 봉창 두드리는 답이나”고 반문했다.

또 “김 대표와 가족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그동안의 거래내역을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며 “중소기업 회사원을 운운하면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뉴스

호 맴 민 평

이태헌

공정&상식

가짜 공정과 상식 법지의 자유로 뒤에 적폐는 빼고

윤석열

국가인정 공인검찰
노조간담회
인물평장
주적
양식
정치사태영단
시민인정

태헌